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결과의 사회언어학적 함의 Sociolinguistic Implication of the Survey Results of Korean People's Linguistic Consciousness in 2020¹⁾

조태린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trcho@yonsei.ac.kr

1. 머리말

2020년 제4차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를 준비하면서, 기존의 설문 문항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1차 조사(2005년)에서부터 제3차 조사(2015년)까지 사용된 설문지는 2005년에 작성한 설문 문항을 기본으로 하여 조사 차수에 따라 일부 문항을 수정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2005년 당시의 언어 현황에 따라 작성되었다. 따라서 15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설문지는 현재의 언어 현황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설문 목적에 부합되게 주제와 문항을 정비하였다.

설문 문항 정비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현재의 언어 사용 현황 및 국립국어원의 업무를 반영하였다. 둘째,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가 <국어기본법> 제9조에 근거해 시행되는 것임을 고려하여, 국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어 관련 통계 수집 창구로 활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 셋째, 2005년 이후 언어 의식의 변화 추이 조사가 필요한 설문 항목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외에도 설문 문항의 규모와 표현, 배치 등을 다음과 같이 재정비했다. 첫째, 언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문항이 증가했지만, 조사 분량과 시간이 과도하지 않도록 문항의 수를 60개 이내로 제한했다. 둘째, 기존 문항들에서는 4점과 5점 척도가 원칙 없이 혼재되어 있었고 답변 문항의 긍정과 부정 배치 순서에도 일관성이 없었지만, 시계열 분석이 필요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5점 척도로 통일했고 모든 답변 문항을 부정에서 긍정 순으로 배치했다. 셋째, 설문 문항에 사용된 학술 및 정책 용어는 최대한 일상 용어로 바꾸거나 쉬운 말로 풀어서 표현했다. 넷째, 응답자의 이해와 상황을 고려하여 설문 문항을 연관성 있는 주제를 순차적으로 배치했다.

이러한 정비 결과로 너무 당위적 또는 개인적인 답변이 예상되거나 조사 결과의 언어 정책적, 사회언어학적 의미를 찾기 어려운 기존 문항을 대폭 삭제하고, 국어 능력, 공공언어, 차별적 언어/혐오 표현, 다문화 가정 언어, 한국어 진흥 등 국어 정책 관련 시의성 있는 6개 소주제를 새로 설정하고 해당 신규 문항을 추가했다. 위와 같은 문항 정비를 거쳐 진행된 설문 조사의 결과는 모두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아래에서는 그중에서도 사회언어학적 함의가 상대적으로 큰 결과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²⁾

1) 이 발표는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2020, 국립국어원) 결과보고서의 'IV. 사회언어학적 함의와 정책 제언'의 주요 내용을 기반으로 하며, 이 내용은 발표자와 함께 해당 과제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양수경 선생님(서울대)과 김주성, 심주희 선생님(연세대)이 함께 작성하였다. 다만 이 발표를 위한 주요 내용 선별과 추가 해석 및 기술은 전적으로 발표자가 수행한 것임을 밝힌다.

2. 국어에 대한 관심과 인상

2.1. 국어에 대한 관심

국어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지만, 적극적 관심(5.6%)보다는 소극적 관심(49.8%)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심이 특히 20대~40대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이 연령대에서 국어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사회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해당 연령대는 국어 사용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국어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가장 큰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력과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국어에 관한 관심의 정도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어에 대한 관심에서 계층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2.2. 국어에 대한 인상

국어에 대해 기능성(뜻이 정확하다, 논리적이다, 학문/과학 활동에 유리하다), 심미성(품위가 있다, 아름답다, 발음이 부드럽다), 습득의 용이성(배우기 쉽다) 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인식이 부정적인 인식보다 더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습득의 용이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배우기 쉽다'는 응답 비율이 낮은 것은 국어의 경어법 등 외국인이 학습하기에 쉽지 않은 언어라고 객관화하여 인식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한글 맞춤법 등의 어문 규범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익히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3. 국어 사용에 대한 인식

3.1. 바른 언어 사용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만이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은 절반 가량의 국민이 언어생활의 혼란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고연령, 저학력층이 국어 사용에서의 혼란과 불안, 자신감 부족을 많이 느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이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로 말과 글의 응집성, 발음이나 억양, 어휘력, 높임말 사용 문제보다도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문제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문 규범 오류가 가장 쉽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언어 문제의 전부라는 경직된 규범주의적 인식이 일반화되었다는 사실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발표에서는 조사 결과의 사회언어학적 함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거나 언급될 수 있는 사회언어학 관련 학술 저서나 논문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 출처를 밝혀 인용하거나 참고문헌 목록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집담회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한 것임을 밝힌다.

3.2. 높임말 사용

국어의 높임말 사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통적인 높임말과 달리 사물이 주어인 문장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적절하다'의 3배가 넘게 나타났는데, 이는 규범적 문법을 중시하는 국민이 다수임을 보여준다. 특히 새로운 표현의 사용에 적극적이고 경험 기회가 많다고 여겨지는 젊은 세대일수록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특정 표현에의 노출 빈도와 수용성이 비례한다는 기존의 가설을 벗어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조사와 이유 파악이 필요하다.

한편, 사물이 주어인 문장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응답자들(18.4%)은 사물 존칭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상대방을 대우하는 나름의 기능을 한다는 점을 중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3.3.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욕설과 비속어를 (가끔 또는 자주) 사용한다는 비율이 절반에 가깝게 나타났는데, 국민들의 사용 정도와 본인의 사용 정도 간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이 객관적인 결과인지, 과소 보고의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과 이유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욕설 및 비속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친근감 표출, 주변 사용, 언어유희 등의 이유로 사용한다는 응답도 많다는 점에서 욕설 및 비속어의 일상화 현상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조사 방법론적 측면에서 욕설과 비속어의 사용 정도를 질문하는 문항은 욕설과 비속어를 구분하여 질문하고 각각의 예시를 통해 구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응답자들은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3.4. 표준어와 지역 방언 사용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표준어라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5년 이후로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평소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 방언 사용자들과 대화할 때 편하고 친근한 느낌(79.9%)과 본인의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86.1%)도 이전 조사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력과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때와 장소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크고, 이러한 자신감이 지역 방언에 대한 포용적, 긍정적 태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표준어를 잘 사용하는 편('매우 잘 사용한다' 포함)이라는 응답은 여성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수도권 지역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응답률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수도권, 젊은층, 고학력층, 고소득층에서 표준형(위세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기존의 사회언어학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3.5. 외래어/외국어와 순화어 사용

평소 읽거나 듣는 말 중에 외래어나 외국어가 '많이 사용된다'는 응답(54.3%)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태도에서는 외래어나 외국어의 사용을 지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개입적 태도(41.4%)보다 상관없거나 어쩔 수 없다는 방임적 태도(58.6%)가 더 많았다. 집단별로는 젊은 세대나 고학력, 고소득층은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에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경향이 강하며 인위적으로 줄여가는 것에는 덜 동의하는 편이지만, 노년층이나 저학력, 저소득층은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에 대해 인위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더 동의하는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외래어/외국어 순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순화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경향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익숙해진 외래어/외국어는 굳이 고칠 필요가 없다'는 현상 유지에 대한 견해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많이 나타났다.

한편 일본에서 온 외래어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본어임이 쉽게 드러나는 외래어에 비해 일본식 한자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반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일본식 한자어를 '익숙하니까 그대로 우리말로 받아들여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를 넘지 못했는데, 이는 설문 문항에서 해당 단어들이 일본식 한자어임을 설명해 주었다는 사실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3.6. 대중 매체의 언어 사용

국민 대다수가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긍정적(46.7%) 또는 부정적(34.4%)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처럼 많은 영향을 끼치는 방송 언어의 정책적 관리나 규제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7%로 나타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9%에 그쳐 국민의 대다수가 방송 언어에 대한 정책적 관리나 규제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언어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이 긍정적 평가에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처럼 인터넷 언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은 2005년 이후 지속되고 있으나, 그 정도는 점차 약화되는 추이가 나타났다. 그런데 연령대에 따라 인터넷 언어의 인지도 사용 빈도, 부정적 평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7. 외국 문자 사용

한글 표기 없이 영어 등 외국어를 로마자 알파벳 등의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곤란한 경험이 '있다'(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37.4%)이 '없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26.4%)보다 높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특히 50대와 60대), 학력이 낮을수록 일상생활에서 곤란했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응답자(45.3%)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응답자(17.0%)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처럼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언어 교육과 언어 정책에 대한 의견

4.1. 국어 교육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교에서의 국어 교육 개선'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대중 매체의 언어 사용과 가정 교육'이 이었으며, '성인의 국어 학습 기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에게 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 교육에서의 결손을 평생교육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의 의미를 몰라서 곤란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2020년 큰 폭으로 증가(▲27%)했는데, 이러한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르는 말이 나올 경우 추측하고 넘어가거나 그냥 지나치는 '소극적' 대응(54.8%)이, 인터넷이나 사전을 검색해 보거나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는 '적극적' 대응(45.2%)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어 교육의 문제보다 매체 언어 사용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4.2. 외국어 교육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할 때, 2005년 이후 영어에 대한 선호도는 꾸준히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중국어와 일본어에 대한 선호도는 점차 하락하여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 2, 3순위 응답을 합친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국제 통용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해서 유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중국어에 대한 선호도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와 경제 교류 확대 정도만큼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학습할 외국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국제 통용어로서의 기능을 가장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언어별로는 영어의 경우 국제 통용어 기능, 중국어의 경우 국제적 업무상 필요, 일본어의 경우 학업적 필요 등의 측면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필요와 목적에 따라 학습 언어의 선택을 달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3. 어문 규범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본인은 어문 규범을 잘 지키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대~40대에서 어문 규범을 '잘 지키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회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청장년층의 규범 의식이 일반적으로 가장 높다는 기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한글 맞춤법 등의 어문 규범을 '잘 지키는 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나는데, 이는 어문 규범의 준수를 위해서는 상당 수준의 학습이 필요하고 어문 규범의 준수가 계층적 지표로도 기능하는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어문 규범을 준수하는 태도는 어문 규범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 '어문 규범에 맞는 표기를 국민에게 잘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응답(47.6%)이 가장 많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어문 규범의 변화를 인정하는 응답('기존 표기를 틀린 것으로 하고 널리 쓰이는 표기를 맞는 것으로 인정한다', '기존 표기와 함께 널리 쓰이는 표기도 맞는 표기로 추가로 인정한다', '향후 많이 쓰는 쪽이 자연스럽게 맞는 표기가 되도록 내버려 둔다')을 합친 비율(58.4%)이 '홍보와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많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4. 공공언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이해하기 쉬운 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33.4%)이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22.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과반수에 훨씬 모자라고,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은 여전히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 언어의 주된 문제로 지적된 '복잡하고 길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낯선 한자어 등 어려운 단어 사용'은 민원인이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의사소통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드는 요소임을 지적할 수 있다.

4.5. 차별적 표현과 혐오 표현

대다수의 국민들이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 표현의 사용이 예전보다 많아진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언론이나 학계와 교육계에서 관련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상에서도 차별을 판단할 수 있는 인지 감수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절반이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표현의 확산에 대한 인지도에 비하면, 법적, 제도적 규제와 처벌에 찬성하는 비율은 다소 낮은 편이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6. 특수 언어

수어와 점자에 대한 인지도와 그에 대한 학습 의사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어에 대한 인지도나 학습 의사가 점자에 대한 인지도나 학습 의사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TV 방송 등에서 수어 통역의 노출 비율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해당 문항은 수어나 점자에 대한 지식이나 사용 능력이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응답 결과를 보면 그러한 의도가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되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향후 조사에서는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질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4.7. 다문화 가정 언어

정착 이주민들이 그들의 집단 내에서 이주민의 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률(44.7%)과 보통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률(42.0%)을 합해 보면(86.7%), 이주민의 모어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비교적 관용적인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긍정적' 응답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부정적' 응답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이주민과 그 자녀에게 국가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률(56.8%)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률(11.7%)보다 5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젊은 세대와 고학력층이 대체로 이주민 집단 내 이주민 모어 사용에 관용적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8. 한국어 진흥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률(55.3%)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률(13.9%)보다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이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과 친한파 국제 인재 양성 등 장기적 국익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률(57.9%)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률(10.4%)보다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한국어의 위상 제고와 국제적 사용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4.9. 남북한 언어 통일

우리 국민들이 북한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률(44.9%)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률(19.0%)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과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인 '통일되었을 때 언어 차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라는 응답은 미래의 통일 대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20% 후반의 비슷한 비율을 보인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어를 알아야 하므로'와 '북한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북한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라는 응답은 미래의 통일을 전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두 응답을 합치면 절반 이상의 비율을 보인다.

남북한 언어 통합 시 표준어 정책의 기준과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남한어를 중심으로 한 표준어 정책을 선호하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응답 내에서는 '남한어를 중심으로 하되 북한어를 일부 포함하는 표준어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응답이 '남한어를 기준으로 표준어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응답보다 조금 더 많다는 점에서 북한어 사용자를 고려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5. 맺음말

(생략)

참고 문헌

국립국어원(2005), 2005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10),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15), 201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20),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